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폭탄 돌리기’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監査) 조례안이 폭탄 돌리기 형국이 되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제정한 조례를 광주시가 단체장 권한 침해라며 재의결을 요구하고 의회는 이를 두고 본회의 파행까지 감수하면서 의견 조율에 진통을 겪고 있다.

조례 존폐 여부를 두고도 일부 시민사회단체는 ‘필요한 조례’라고 주장한 반면 사회복지시설은 중복 감사 등을 이유로 ‘악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어 일선에서도 의견이 충돌하고 있다.

광주시의회는 9일 제266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시가 재의를 요구한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안 폐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으나 내부 이견으로 진통을 겪었다. 민선 6기 들어 재의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시의회는 상임위, 의정단, 전체 의원 간담회를 거쳐 일단 재의 요구안은 상정하되, 이번주 안에 의원과 일반 시민, 복지법인 대표 등이 참석하는 토론회 등을 거친 뒤 이르면 폐회일인 오는 16일, 늦어도 6월 임시회에서 가부 의결기로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당초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본회의 개최는 1시간10분 가량 연기되는 파행을 겪었다. 의회 일정상 5월 임시회는 없다.

의회는 집행부 측의 재의 요구가 있을 경우 최대 10차례에 걸쳐 본회의 상정 기회를 갖게 되며, 10번의 기회가 모두 무산되면 관련 조례는 자동 폐기된다. 의회 일정상 상정 기회는 4월 임시회 폐회일인 오는 16일, 6월 임시회 개·폐회일인 오는 20일과 27일, 여기에 원 포인트 의회까지 감안하면 최대 4회다.

이 기간 안에 토론회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 안전이 상정되면 곧바로 본회의 표결이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가 찬성하면 재의안을 가결된다. 즉 당초 의결됐던 조례안이 재차 의결돼 시행의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재의결된 조례안은 자치단체로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공포되게 되며, 단체장이 공포하지 않으면 의회 의장이 공포하게 된다. 자치단체장은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면 대법원에 소(訴)를 제기할 수 있다.

지난달 12일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는 사회복지시설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시 감사위원회를 중심으로 행정, 안전, 노무, 인권 보장은 물론 보조금·후원금·수익사업에 관한 회계 전반, 공사·구매 등 계약 업무, 부동산·장비 등 자산관리에 관한 전반사항을 감사하도록 규정하

광주시 재의 요구에 광주시의회 의견 조율 진통 일부 NGO “조례 필요” vs 복지시설 “악법 폐지” 7대 의회 상정 기회 최대 4회, 자동폐기될 수도

고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의회가 집행부에 특정 분야 감사를 지시하는 것이어서 시장 고유권한인 지휘감독 권한을 침해할 수 있다”며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했다. 시민사회 진영의 찬반 의견도 뜨겁다. 광주시 사회복지시설 감사조례

폐지 비상대책위는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은 과중하고 중복일 뿐 아니라 시 감사위의 독립성마저 훼손하는 표적감사”라며 “오만하고 비민주적인 악법은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에 대한 강제입에도 불구하고, 공청회는 물론이고 당사자인 사회복지

시설들과 최소한 논의도 없이 소수에 의해 제정된 악법 조례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반면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와 민주일반연맹 광주일반노조, 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일반 감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조례고, 경기도 광주와 하남 등지에서 시행하는 만큼 재검토할 이유가 없다”고 조례 유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시설의 투명성과 공공성을 높이고 사회적 약자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하다”라며 주장도 펴고 있다.

서은홍 기자



재활용품 쓰레기 대란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정부와 지자체가 재활용 쓰레기 중재인 등을 내놓을 예정으로 이번주가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오후 경기 고양시 한 재활용품 수거업체에서 폐비닐을 비롯한 각종 재활용 쓰레기 분류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편법인사 vs 문제없다”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 임기 연장 논란

광주문화재단 사무처장의 임기 1년 연장을 놓고 지역 문화단체가 “편법 인사”라며 반발한 반면 재단 측은 “규정에 의한 적법한 인사”라고 반박해 논란이 일고 있다.

문화도시광주시민행동(시민행동)은 9일 “광주문화재단이 규정을 무시하고 사무처장의 임기를 1년 연장했다”며 “임기 연장을 무효화 하고 편법 인사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행동은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광주문화재단은 임기가 만료된 사무처장의 임기를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재단은 근거로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0조에 의거 임기제 공무원인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임기를 연장할 수 있다”는 것과 재단 인사위의 심의와 재단 이사장(광주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제시했다.

또 “지방 출자 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A등급 평가를 받은 것을 사무처장 임기 연장의 근거로 제시했지만 재단 인사규정 43조에는 사무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있고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사규정 9조 1항에는 광주문화재단 인사위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당연직으로 맡게 돼 있다”며 “이는 사무처장이 자신이 임기 연장을 의결한 ‘셀프 인사’의 전형적인 사례이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문화재단 측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에 의해 사무처장은 직원으로 규정돼 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를 거친 것이다”고 주장했다.

‘셀프 인사’에 대해서는 “사무처장은 내부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민간위원 5명 중 연장자를 인사위원장으로 뽑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재단 초기 사무처장 임기가 없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 3년으로 규정하고 최대 2년까지 연임할 수 있다는 규정을 만들었다”며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광주문화재단은 노래 입을 위한 행진곡을 작곡한 김종률 작곡가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사무처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최남규 기자

보이스피싱으로 가로챈 돈 송금 50대 구속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보이스 피싱(전화금융사기)으로 가로챈 돈을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A(52)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2일부터 이달 5일까지 광주·대구·서울·제주 등지에서 중국 보이스피싱 사기단의 지시를 받고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5798만 원을 7차례에 걸쳐 중국 조직에 송금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송금액인 A씨는 통신 추적이 불가능한 특정 채팅 어플로만 지시를 받았으며, 인터넷에서 대부업체 직원 모집 공고(채권회수 업무)를 보고 이 같은 일에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다른 조직원 B(40·여)씨 등에게 건네받은 돈을 중국의 총책에게 무통장 입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일당으로 8만~40만원의 받고, 송금한 돈의 1%를 수수료·성과금으로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어머니와 다툰 뒤 모텔에 불 지른 30대 검거

광주 북부경찰서는 9일 어머니가 살던 모텔 등지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방화 등)로 A(35)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난달 23일 오전 1시32분께 광주 북구 한 모텔 2층과 4층에 놓인 세탁기 2대 주변의 모직물에 라이터로 불을 질러 세탁기 등을 태운 혐의다.

A씨는 앞서 지난 2월3일 오전 1시4분께 광주 북구 신축 공사 중인 원룸에서 건축자재를 덮어둔 보온덮개에도 같은 방법으로 불을 질러 1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할머니와 함께 사는 A씨는 어머니와 다툰 뒤 어머니 홀로 세들어 사는 모텔을 찾아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 전 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여부 조사

순천경찰서가 왕조 2동 지역구 출신 S 전 시의원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조사중이다.

더불어민주당으로 전남도의원 예비후보로 등록한 S씨는 지난 2월 열린 평창동계올림픽 입장권 10여매를 유권자들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다. 9일 경찰에 따르면 S 도의원 후보자는 자신의 지역구 주민과 지인 9명의 명단을 순천시청에 전달해 이들이 올림픽 관람을 하게 했다.

장애인과 다문화가정, 소외계층 등에게 제공해야 할 입장권이 일반 시민들에게 증정되도록 한 것이다.

전남도는 ‘2018 평창동계올림픽 및 패럴림픽대회’와 관련해 전남 22개 시·군 등에 입장권 구매 지원 계획을 밝히면서 소외계층, 다문화가정, 다자녀 등에게 제공하도록 했다.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와 ‘정탁금지법’ 문제로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통반장, 사립학교 교직원에게는 배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이 입장권을 직접 제공하거나 선출직공무원이 입장권을 주는 것으로 추정, 오인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공문에 명기했다.

하지만 S 도의원 후보자는 소외계층이 아닌 일반인 9명의 명단을 순천시에 제공해 이들이 관람 혜택을 보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장권은 1매당 5만원이었다.

주민 김모(56)씨는 “올림픽이라는 큰 대회를 보고 싶어하는 사회적 약자들의 입장은 외면한 채 시의원이 주변 사람들만 챙기는 모습에 아주 실망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순천=김종영 기자

다툼 끝에 동거녀 숨지게 한 50대 영장

경찰이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5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영암경찰서는 지난 5일 오전 7시께 영암군 한 주택에서 동거녀 A(53·여)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정모(5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A씨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다투는 과정에서 격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와 A씨는 약 5년 전부터 교제를 시작한 뒤 정씨의 집에서 동거해오다, A씨의 남자 문제로 이달 초부터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암=조대호 기자

